

FOREST FIRE

ISSUE PAPER

TALK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꺼지지 않는 재난, 산불 진화 인력이 위험하다

‘역대 최악의 산불’ 지난 3월 발생한 유례 없는 대형산불로 31명이 사망했고, 4만 8,238헥타르의 산림이 불탔다. 주택 4천여 동이 소실됐고, 이재민만 3천여 명이 넘는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운암사마저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불에 탄 국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만 35건. 피해액은 2조 원을 가뿐히 넘겼다. 화마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이런 산불은 처음”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따로 있다. 열흘간 나라를 집어삼킨 이번 산불이 ‘꺼지지 않는 재난’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성묘객의 실화, 고온 건조한 날씨, 그리고 강풍이 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배경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한다. 마른 장작 상태나 다름없는 산림, 그것도 테르펜 같은 휘발성 물질이 함유된 소나무 숲.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닥치면 작은 불씨 하나가 산 하나를 금세 집어삼키게 된다. 이런 초대형 산불은 앞으로 더 자주, 더 거세게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구조적 재난이다. 우리 사회는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

●● ‘전문’도 ‘특수’도 없는 진화대

이번 산불로 인해 진화작업에 투입됐던 인력 가운데 10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 이들 대부분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속이었다. 산림청 산하 산불 진화 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공무원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인 공중진화대, 그리고 지자체와 산림청이 함께 운영하는 계약직 산불전문예방진화대다. 전체 인력 1만 143명 중 95%에 해당하는 9,604명이 이 계약직 예방진화대원이다.

모든 재난이 그렇듯 화마도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기간도 11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 7개월여뿐이다. 평균 연령은 61세. 40대 이하 ‘젊은이’는 고작 10%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 진화대원에게 지급된 장비는 갈퀴, 등짐펌프, 방화복이 전부였다. ‘산불관리 통합규정’에는 안전화, 방화용 장갑, 방염텐트 등도 지급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현장의 진화대원들은 화염과 발암물질, 유독가스 속을 맨몸에 가까운 장비로 뛰어들어야 했다. 이들은 “산불 진압을 위한 전문교육만이라도 받고 싶다”고 말한다. 진화대원들은 영상을 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전교육 10시간만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돼 화재 대응 경험도 없이 불길 앞에 서야 한다. 중앙소방학교에서 12주에서 최대 24주까지 교육을 받고 배치되는 소방공무원과 대비된다.

올해 9년 차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신현훈 씨는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직함엔 ‘전문’, ‘특수’라는 단어가 붙지만, 정말 그만한 자격을 갖춘 상태였는지 늘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혹시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은 건 아닌지 늘 마음이 무겁다”는 그의 말은 이번 재난 대응 체계의 민낯을 보여준다.

화재 현장은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 중금속, 미세먼지가 복합적으로 뒤엉킨 유해 구역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곳이

일터인 진화대원들에게 건강관리 추적·관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일상적 재난이 된 산불, 최전선의 안전부터 살피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창녕군 등의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기후변화 시대의 일상적 재난이 된 산불. 자연에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재난의 최전선에 선 진화대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

기후변화로
일상이 된 산불,
자연에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진화대원의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된다.

